

##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 대회 (2005년 11월 1일 화 ~ 4일 금)

- 주최 : KIN(Korea International Network)
  - 주관 : 제2회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추진위원회(10개 단체)  
동북아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평화센터, 동북아평화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원,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타운신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후원 : 재외동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리아포커스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역사나눔1-4

## 원폭2세 환우, 김형욱씨의 삶과 죽음

- 원폭피해자 지원특별법의 필요성 -

김동렬 | KYC 원폭피해자지원특별위원장, 대구KYC 사무처장

1945년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 [廣島] 와 나가사키 [長崎] 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그 당시 사망자수는 히로시마에서 14만 명, 나가사키에서 7만 명이 발생하였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파괴무기는, 수많은 귀중한 생명을 일순간에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설령 목숨을 구한 피폭자에게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흔과 후유증을 남겼다.

원폭의 피해는 그것이 투하될 때, 일어나는 가공할 물리적인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자와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심리적·의학적·생물학적 위협을 준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것은 원폭투하로 인해 발생한 화상(열상)이나 폭풍피해에 방사선 피해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피폭이 된지 60여년이 흘러도, 피폭자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5월 29일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원폭2세 환우”로서 아픔을 호소했던 36세의 나이로 김형욱씨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원폭2세 환우로서 자신의 처지와 조건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은 2002년 3월이다. 그 후 2005년 5월 29일까지 약 3년 2개월 동안 자신의 처지와 조건을 호소하며 반핵, 평화, 인권운동가로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선천성 면역글로블린결핍증으로 그의 폐는 불과 30% 밖에 제 기능을 할 수 없었지만 자신과의 싸움을 전개하며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원폭2세 환우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특별법” 제정에 온 힘을 쏟았다.

‘원폭2세 환우’ 문제는 김형욱씨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리는 경상남도 합천에는 김형욱씨와 같이 건강상 이유로 결혼은 커녕, 직업도 구하지 못하는 “원폭2세 환우” 들이 오로지 가족의 보호아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원폭피해자 지원운동을 했던 필자로는 기자들과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원폭의 영향으로 실제로 ‘유전’ 이 됩니까? 원폭피해자 스스로도 정말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다. 원폭피해자가 살아온 생애를 녹취하기 위해 원폭0피해자의 구술증언을 듣다보면 원폭피해자(1세)는 스스로도 원폭피해자임을 밝히길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물며 자신의 자식이 어떤 아픔을 앓고 있다면 2세의 아픔을 드러낼 수 있었겠는가?

반전, 반핵, 인권운동가 김형욱, 그는 떠났지만 그가 결성한 ‘원폭2세 환우회’ 가입하였던 회원은 60여명이나 된다. 2세환우회에 회원은 60여명이지만 김형욱씨와 같이 직접 뵈 수 있는 회원을 찾기란 어렵다. 모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원폭피해자 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원폭 2세 환우회의 가입은 늘어날 전망이다. 원폭피해자 1세가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새롭게 가입하게 된 계기도 일본의 원호법의 제정과 재외피폭자 건강관리수당의 지급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국가적인 대책과 보호가 없었기에 스스로 감내하며 원폭피해자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다.

2005년 1월 20일 한국정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구호 1974』라는 정부 공식문서를 공개하였다. 이 문서에는 1974년 당시 한국정부가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에 등록된 원폭피해자1세를 9,362명으로 공식파악하고 있었으며 그 외 공개하지 않은 원폭피해자 1세까지 추정하면 약 2만 여명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전신인 보건사회부는 다음과 같은 한국원폭피해자1세, 2세들에 대한 정부 방침을 표명하고 있었다.

‘원폭피해자의 병상은 특수하여 외상뿐만 아니라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병발증을 포함하고 있어 특수치료가 필요’ 하며 ‘이 병은 유전성이 있어 피폭자들의 후손에 대한 건강관리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라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 피폭자(1세,2세)에 대한 치료와 재활대책이 시급하나 일본에 파견 치료함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국내에 이들을(원폭피해자1세, 2세) 위한 현대적 치료센터 및 재활원 설립이 요망된다’ 라고 하여 한국원폭피해자1세, 2세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400병상 규모의 국립원폭전문병원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보건사회부의 계획이 취소되었을까? 이제 보건복지부가 30년 전의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해야 한다. 혹자는 인권과 평화의 트레이트 마크인 김근태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고 있는데 왜 주무부서에 거론하고 있지 않는지 의아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부재에 대한 자성과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원폭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든 사회적 조건이 있었다. 필자도 한반도에 원폭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2001년경 1980년 중반, 학창시절 반전, 반핵가를 수없이 불렀지만 한반도에 핵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는 없었다.

무엇 때문일까?

첫 번째로 1945년 해방의 기쁨은 커녕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남한사회는 친미반공 국가로 전락했기 때문인 것이다. 원폭을 투하한 당사국이 미국임에도 미국에 대해 어떤 계기도

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반미와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존재했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준 미국이 여전히 소련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나라로 인식했기 때문인 것이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은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원폭 투하로 해방되었다라는 단순 기술로 교과서에 기록한 것은 역사인식에 상당한 오류를 만들었다. 원폭은 우리를 해방시켜 준 무기였으며 미국은 우리에게 은인이다라는 등식을 성립하게 만들었다. 원폭투하로 희생된 조선인이 있었다는 기록은 교과서에도 보지 못했으며, 어느 선생님도 그런 역사를 얘기해 준적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은 조선인 원폭피해자의 존재조차 모르게 만들었던 것이다.

세 번째로 65년 체결된 잘못된 한일협정 때문이었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없었다면 조선인 원폭피해자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폭의 문제는 1차적인 책임은 일본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한-일협정 문서에는 원폭피해자는 문제는 다루지도 않았으며, 일본 정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한국 정부의 책임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19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 누락된 원폭피해자 문제해결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별법 제정으로 원폭피해자에 대한 인권의 보호는 물론 원폭의 참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평화자료관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평화자료관은 일제강점기의 역사, 원폭피해자의 증언, 피폭자 실태조사보고서, 원폭피해에 대한 의학적 사회학적 연구논문과 일반서적, 피폭자운동기록, 원폭투하 시비에 대한 법적인 연구논문과 일반서적 등이 보관되어 언제나 핵의 참상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주) 미국의 원폭 투하는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불가피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신흥강국인 소련을 견제하고 전후 최강국의 위치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세계지배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은 일본에 원폭을 투하하기 3개월 전부터 일본이 항복요구에 따를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미국의 원폭투하는 전적으로 불필요한 것이었다.” 알퍼 로비츠 역사 학자(1993.8.12 동아일보 )』

## 원폭60년 KYC 원폭피해자 지원 특위 활동 보고 -

### 1. 원폭특위 활동 보고

- ① 원폭피해자 인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국 순회전 개최 및 특별법 제정 서명
  - 수원 : 6.13~20(수원 YWCA 1층 로비-원폭피해자협회 기호 지부 연계)
  - 대구 : 7.19~26(동대구 역사-원폭피해자 협회 합천지부 연계)
  - 목포 : 8.12~19(목포 자연사 박물관)

- 청주 : 9.1~10(청주 서원대학교 사범대학관)
  - 포항 : 10.10~13(위덕대학교 전시실)
  - 천안 : 10.17~21(천안역)
- ②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술증언 사업
- 대구 : 합천지부(매월1회 복지관 방문 및 1:1 구술증언 사업 : 평화길라잡이 운영)
  - 천안 : 기호지부(평택)와 방문 및 구술증언 준비
- ③ 원폭피해자 및 2세 환우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대위 연대활동
- 각종 연대사업 진행 : 문화제/ 증언대회/ 서울 전시회 등 준비
  - 특별법 제정 관련 활동 : 기자회견, 공청회, 결의문 채택 활동 등
- ④ 반핵평화 사업 기획단
- 반핵평화교실(전문 강좌/일반강좌), 평화활동가 워크샵
  -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와 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회의 : 10.26~27  
(평화네트워크,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피스데포(일본NGO) 공동 주최)

## 2) 대구KYC 활동 보고

- ① 원폭피해자 생애구술증언 자원활동가 평화길라잡이 현장교육 - 히로시마 평화기행  
2005년 1월 24일~ 28일(4박 5일)
- ② 원폭 60주년 대구KYC 특별강연회 - 한일 시민사회의 과제  
조선인 원폭피해자의 삶과 인권 - 일본의 지성 이치바준코 선생 강연회  
2005년 3월 17일, 청소년문화의 집
- ③ 원폭피해자 생애구술증언을 위한 합천방문(총5차례)  
(매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및 가정방문)
- ④ 대구경북대학생과함께하는 합천 평화기행(2박 3일)  
7월 22일~24일, 합천호 자연관광농원, 합천 장전 야영수련장
- ⑤ 한반도 평화와 원폭피해자 인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국순회 대구전시회(8일간)  
7월 19일~26일, 동대구역사
- ⑥ 원폭 60주년 희생자 위령제 참가(8월 6일, 대구,합천)
- ⑦ 3회 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평화캠프(1박 2일)  
10월 15일~16일, 경주, 포항, 총 62명 참가
- ⑧ 공익포털사이트 해피빈 - 생애구술증언 사업 특별 이벤트 실시(약 두 달간)

원폭피해자 생애구술증언사업 시민참여 소액기부운동 -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2005년 8.15일~10월 14일, 총기부금액 3,002,600원,

필자 주)이 글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발간하는 ‘생명과 의료’ 23호에 실린 글이다. 해외 NGO 활동가대회에 원고자료로 그대로 신는다. 원폭피해자 문제에 해외 NGO 활동가의 관심을 기대한다.